

의안번호	제633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3월 일 (제328회)

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
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

제 안 자	건설소방위원장
제안연월일	2014년 3월 20일

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

의안
번호

633

제안연월일 : 2014. 3. 20.

제안자 : 건설소방위원장

□ 주 문

- 최근 정부는 지역 발전전략을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.
-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,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키울 것임.
- 전 국토 면적의 11.8%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%, 외국인 투자유치의 65.2%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,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.

□ 제안이유

-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,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,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 하는 건의문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제출하고자함.

□ 보내는 곳: 청와대, 국회의장, 국무총리실, 기획재정부,

국토교통부, 국회기획재정위원회, 국회국토교통위원회

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 의 안

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!

강창희 국회의장님 !

정홍원 국무총리님 !

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님 !

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!

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!

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!

최근 정부는 지역 주도의 「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」을 지난 3월 12일 발표했습니다.

지역 발전전략을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은 재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

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,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키울 것입니다.

특히,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중 30%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편중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가 조장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.

또한, 주거용으로만 제한되던 개발제한구역을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민간개발을 허용키로 하였는데,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포함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중국발 미세먼지·황사 등과 결합하여 이를 치유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부어야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.

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, 전 국토 면적의 11.8%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%, 외국인 투자유치의 65.2%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있는 현실이므로,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,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 수도권은 더욱 더 비대해지고, 지방은 현재보다 더욱 황폐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.

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생발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,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.

첫째,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둘째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셋째, 기업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.

2014년 3월 20일

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